

<p>구국을 위한 행동하는 양심실천운동본부</p> <p>기자회견문</p> <p>(제 2022-08 호)</p>	<input type="checkbox"/> 제공일 : 2022.04.19.	<input type="checkbox"/> 보도요망일 : 2022.04.19. 이후
	<input type="checkbox"/> 면 수 : 총 5 면	<input type="checkbox"/> 첨 부 : 4 매
<input type="checkbox"/> 작성부서 :		
<input type="checkbox"/> 자료문의 : 행실본 대표 정 함 철 HP. 010-4379-1051		
<p>강원도 원주시 남산로149번길 18, 가동 306호 (일산동, 일산연립) / 전화 (033)766-3929 팩스 (033)735-3928 / 웹사이트 : www.Act-csc.com / E-mail : ham9322@hanmail.net</p>		

“진보좌파세력은 위선의 가면을 벗고 독재자 전범 푸틴을 규탄하라!”
이광재 외교통일위원장은 반전평화운동에 앞장서고, 평소 반전평화운동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해온 원주시민연대는 푸틴 반전평화집회를 개최하라!

지난 2월 24일 우크라이나 현지 시각 새벽 5시에 동부와 남부, 북부 3면을 통해 푸틴의 러시아군은 군사시설과 민간시설을 구분하지 않고 무자비한 폭격을 시작으로 중국 우한 발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함께 고통을 받고 힘겹게 극복하고 있는 시점에서 명분 없는 추악한 침략전쟁을 일으켜 참혹한 인명 살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결과는 지금의 전황에서 보여주듯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무고한 생명들이 끝없이 죽어가고, 러시아 군인들조차 무의미한 개죽음으로 내몰리고 있고, 푸틴은 빈번히 핵미사일로 서방 자유국가들을 위협하는 등, 전 세계 평화를 무참히 짓밟는 만행이 자행되고 있다.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북한 김정은 정권은 이번 러시아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사태를 통해 독재체제 유지와 한반도 적화통일을 위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한 몸부림을 더욱 강행하고 있고, 미국을 비롯한 자유세계는 하루가 다르게 김정은 정권에 대한 제재수위를 높여가고 있어 한반도의 전운은 더욱 깊게 드리워지고 있다.

결국, 핵무기를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한 미치광이 푸틴을 전 세계가 한마음으로 제거하지 않는 한, 러시아 주변의 약소국들은 자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핵무기 보유를 위한 노력은 도미노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결국 IS 등의 자살테러 단체에 핵물질이 반입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 종국에는 머지않은 장래에 인류는 핵 재앙으로 인한 인류 종말을 자초하는 결과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모두가 예상한 바와 달리,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군사대국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도망가기는커녕, 죽기를 각오하고 국가와 국민의 자유와 독립을 지키기 위하여 전 세계를 상대로 푸틴의 반인륜적인 만행을 고발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특유의 재능과 애국심으로 전 세계 자유진영 국가를 상대로 연설전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쟁광 푸틴의 구소련(소비에트연방) 당시의 영토를 정복하고자하는 야욕을 고발하며, 동유럽 국가들의 자유와 평화를 대신하여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희생되며 싸우고 있는 점을 강조하여 각종 무기물자들을 지원받고 있다.

지난 3월 16일 미국 상하원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젤렌스키 대통령의 연설 직후, 대한민국 국회에도 연설을 요청한 사실이 있으나, 당시 외교통일위원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광재 의원은 20일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국회 차원, 외통위 차원, 의원들 연구모임 차원 등 세 가지 갈래로 이견을 모았다”며 “국회 차원 연설은 부적절하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고 외통위 차원에서 연설을 하는 것도 부담스럽다는 의견이다”며 젤렌스키 대통령의 국회연설을 사실상 거부 통지한 사실이 있었다.

이는 대한민국의 위상과 격조를 떨어뜨리는 행위로 국민적 반감만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으나, 다행히 지난 4월 11일 이광재 외통위원장은 국회도서관에서 의원 60여명 남짓 모인 장소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국회연설을 청빙한 사실이 있었고, 이 모습을 손꼽아 지켜보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소수의 국회의원들은 제각기 당파적 이해득실만을 계산하며 젤렌스키 대통령의 절절한 호소에는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던 모습에서 여야를 불문하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심각히 훼손시킨 역사임은 잊지 않고 기억될 것이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한 목소리로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전쟁을 규탄하며, 유엔헌장과 각종 국제법을 위반한 전쟁범죄임을 선언했고, 비인도적 전쟁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선언했었다.

이에 젤렌스키 대통령의 24번째 반전평화지지 연설을 성사시킨 이광재 의원이 원주시민의 자긍심을 드높이기 위해서라도 이후 반전평화운동을 진정성 있게 이끌어 줄 것을 공

식 요청합니다.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좌파진영 시민단체장들에게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미치광이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개시된 이후로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는 전범 푸틴을 규탄하는 반전평화집회가 지속되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큼은 반전평화집회가 열리지 않는 모습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평소 민주화운동을 성역처럼 강조하며 과거 광주민주화항쟁을 소재로 한 “화려한 휴가”와 고(故)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으로 시작된 6월 항쟁을 소재로 한 “1987” 영화를 통해 전 세계에 자랑스러운 민주화운동의 역사가 있음에도, 푸틴의 명백한 전쟁범죄행태에 지금껏 철저히 침묵 방조하고 있는 모습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입니다.

그리고 1991년도에 창립된 오랜 역사와 경험을 지니고 있는 진보좌파성향의 원주시민연대는 푸틴의 반인륜적인 만행에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위안부 소녀상을 비롯한 사드배치반대, 평화통일과 인권사업을 주요핵심 사업으로 감당하고 있는 것에 더불어 즉각적인 푸틴의 반인륜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반전평화시위에 주도적으로 나설 것을 엄중히 요청합니다.

자칫 그동안 쌓아온 반전평화운동의 순수성이 훼손 폄하되는 사태를 원치 않으며, 때마침 어제(4/18)부로 현 정부의 코로나 방역수칙에서 집회제한이 거의 해제된 시점에 더 이상 반전평화집회를 거부할 명분은 없을 것입니다.

원주시민연대 측의 주도적인 반전평화집회를 위하여 금일 기자회견 직후에 원주의료원 사거리에 게시된 저희 단체 현수막은 임시 철거할 것입니다.

원주시 공무원의 정치편향적인 공무집행을 규탄한다.

지난 3월 9일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정치적 상황보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무고한 생명이 더 이상 희생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반전 집회의 일환으로, 3월 5일(토)에 원주의료원 사거리에서 1차 집회를 시작으로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에 반전평화집회를 개시한 사실이 있다.

이 집회를 개시하면서 전쟁중단 촉구 현수막 6점을 담당정보관과 상의하여 상시 게시하려하였으나, 이틀만인 3월 7일 월요일에 현수막 3점이 도난당한 사건이 발생하여 집회의 연속성을 위해 3점을 추가 제작하여 8일에 다시 부착하였으나, 다음 날 3월 9일에 또 다시 3점이 도난당하여 이 사건을 112에 신고하여 수사가 개시되었고, 수사과정에서 단구동 행정복지센터에 업무 이관된 안전도시과 담당공무원이 무단으로 철거 폐기한 사건이 확인되었다.

옥외광고물법 제2조의 2항(적용상의 주의)에는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라는 규정과 함께 제8조(적용 배제) 4항에는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법규가 명백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구동 안전도시과 담당공무원은 편향적인 정치성향에 의거하여 사람이 없는 집회는 집회로 보지 않는다면 옥외광고물법에 위반하여 임의 철거 폐기하는 만행을 자행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원주시 중앙동 문화의 거리에 수년째 작두형상의 흉물이 방치되어 있음에도 이를 철거해달라는 민원제기에 대해서는 원주시청 불법광고물 담당공무원은 “집회신고 된 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에 적용배제 대상이라 자신들이 임의로 철거할 수 없다”고 답변하여, 민노총 줄개를 자처한 전공노 소속 공무원들의 위법실태를 여실히 확인시켰다.

윤석열 당선인에게 당부합니다.

뒤늦은 감도 없진 않으나, 지난 4월 12일 당선인의 박근혜 전대통령 사저 방문에서 진솔한 사과와 화해로 국정성공의 길이 한 층 열렸으나, 과거 해방직후 공산국가 건국을 위한 남로당의 전위대였던 전평(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의 후예를 자처한 민주노총 산하 단체로 소속된 공무원노조(전공노)와 초중고등교사노조(전교조), 언론노조를 방치한다면 실패한 정부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입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부는 국민여론 공감대 확산을 통해 노동관계법령을 개정하여, 좌우이념에 편향적이어서는 안 되는 언론인과 공무원, 초중고 교사들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상급단체 가입을 불허하고 독자적인 노조활동을 적극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령

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평화를 무참히 짓밟고 있는 푸틴의 전쟁만행을 조기 종식하기 위해서라도 취임즉시 우크라이나의 자국 영공방어를 위한 방어무기 지원에 대해서도 인류애의 전향적인 자세로 대처하여 훼손된 대한민국의 국격을 굳건히 다시 세워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서북청년단 조직재건에 대하여 자유애국진영에 호소하고자 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의 미래는 없다.” 라는 말을 기억할 것입니다.

해방직후 대한민국 건국과정에서의 3.8선 이북에서는 소련군부의 꼭두각시였던 김일성의 반민족매국행위에 맞서다 처절하게 죽어간 동지와 가족들을 뒤로하고 대거 월남했던 자유.민주.민족진영의 애국청년들이 3.8선 이남에서의 공산국가 건국을 위해 앞장섰던 남로당과 전평(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의 적색테러에 죽음으로 맞서지 않았다면 지금의 자유 대한민국은 건국조차 못했음을 좌익진영에서도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서북청년회 선배님들의 고결한 명예를 회복하고 통일을 대비한 조직을 재건하는 길만이 조속한 자유평화통일의 새날을 열어가는 첩경임을 직시하여, 2014년 11월 28일에 공식 재건된 서북청년단 조직재건을 위해 아낌없는 지지와 참여 후원을 요청 드립니다.



2022. 04. 19. 14:00 원주시청 다목적홀

행동하는양심실천운동본부

(www.Act-csc.com)

